

합정 MRO 산업,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전남 서남권, 조선소서 수리가능까지...전국유일 클러스터 해경 정비창 개소땀 합정 등 특수선 분야 확장 기반도 구축

전남도는 30일 지역 조선업 차원의 한-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제1회 합정 MRO 협력 포럼'에 참석, 지역의 조선업 강점과 전남도 차원의 합정 유지·보수·운영(MRO) 육성 방안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재)이태정재단과 국립목포대 글로벌대학 추진단이 공동 주최한 이날 포럼

엔 소영호 전라산업국장, 목포대 송하철 총장, 아태재단 한택수 원장, 대불산단경 영자협의회 유인숙 회장, 조선해양기자재 협동조합 김창수 이사장, 김정일 HD현대 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상무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양중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박사는 보안이 비교적

낮은 합정에 대한 정비 수주나 기자재 수출을 우선 공략하고, 미국이 자국법을 바꾸려는 움직임에 대비해 한국에서 미 상선을 건조하거나, 현지에 이미 진출한 국내 대형 조선사와 손잡고 균형 건조를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삼만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센터장은 미국 MRO와 건조 수주를 위해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와 체계적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나친 경쟁은 피하고 각 조선사가 가진 역량에 맞춰 수주 물량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고, 미국에 직접 진출할 경

우 현지 인력 확보 문제, 높은 인건비, 기자재 공급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광부영 전남도 기반산업과장은 "서남권은 조선소, 기자재, 수리까지 조선업의 모든 포트폴리오가 반경 6km에 집적화된 전국 유일의 조선업 클러스터며, 올해 말 해경정비창 본원이 개장하면 합정을 포함한 특수선 분야로 확장할 최적의 조건까지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정 MRO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김영록 지사, 도민 생명·안전 확보 총력 폭염 위기단계 '심각'...취약계층 집중관리 지시

김영록 전남도지사(사진)는 30일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됨에 따라 폭염 대응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시군과 협력해 도민 생명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전남지역에는 지난 27일 첫 폭염특보가 발효된 이후 22개 모든 시군에 폭염특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남지역 온열질환자는 24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전남도는 폭염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했다. 상황관리, 의료·방역 등 총 5개 반 12개 부서를 중심으로 시군과 협력해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각종 비상 상황에 대비키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폭염 취약계층 안부 확인과 건강수칙 적극 안내 △건설휘판, 야외작업장, 논밭 등에 대한 현장 예찰 강화와

맞춤형 집중 관리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무더위쉼터의 냉방비 지원 확대 △폭염 대비 농·축·수산 재해보험 가입 독려 △재난안전전문자, 마을방송 등 모든 가용 매체를 활용한 폭염 국민행동요령 수시 홍보 등을 주문했다.

특히 경로당 에어컨 가동에 필요한 냉방비 선제적 지원과 함께, 축사 지붕 열차단재 시공과 양식장 액화산소 공급기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가 적기에 지원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폭염 대책 기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내실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산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백정환 기자 holbu@gwangnam.co.kr

▶1면 '전남 해상풍력'서 계속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기능을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라는 독립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에 발맞춰 해당 부처의 유지 및 협력체계 구축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실제 전남은 수주로도 에너지 전환의 선도 지역임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전남은 전국 태양광 발전설비의 20%, 풍력 설비의 45%를 차지하며 모두 1위를 기록 중이다. 특히 신안 해역에서 진행 중인 8.2GW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48조원이 넘는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 단일 프로젝트다. 일부 단지는 올해 말 시운전을 거쳐 2025년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같은 대규모 개발에 따라 전남도는 산업기반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해상풍력 산업박람회'에서는 동부권 13GW 개발비전 선포를 비롯해 발전사와 기자재 기업 간 1:1 매칭 상담, 기자재 공급망 협약 체결 등이 이뤄졌다. 발전사업을 넘어, 제조·수출 중심의 에너지산업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다.

물론 과제도 있다. 송전망 확충, 해양 생태계 보전, 주민 수용성 확보, 인허가 간소화 등은 여전히 전남 해상풍력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로막는 제약 요인이 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인 '바람연금' '햇빛연금'을 확대하고, 정부와의 정책 조율을 통해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정부의 강력한 재생에너지 확대 의지에 발맞춰, 해남 AI 슈퍼클러스터와 연계한 지산지소 모델 실현과 에너지 기본소득 도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전남 가족친화문화 확산 '가족행복콘서트'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0일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전남 가족친화문화 확산 '가족행복콘서트' 행사에서 공공기관, 기업, 전남가족센터협의회와 모든 가족, 모든 사회구성원을 존중하는 가족친화사회 실현 EFG 경영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광주시, 나주 SRF 운영사와 중재 절차 진행

가동 중지 후 재가동 단계 운영비 2100억 증액 요구

광주시는 고정폐기물 연료(SRF) 생산 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을'과 운영비용 분쟁 해결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SRF 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은 지난 3월 광주시를 상대로 운영비를 78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증액을 요구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청정빛고을은 광주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활용해 SRF를 생산, 한국남방공사가 운영하는 나주SRF 발전시설에 납품하는 업체로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가 대표사를 맡고 있다.

청정빛고을은 2016년 12월 준공해 2017년 1월 2일부터 2032년 1월 1일까지 15년간 운영하기로 광주시와 협약을 맺었

다. 하루 16시간 운영하며 SRF 800t을 생산해 납품하는 조건으로 사업비는 국비 453억원과 청정빛고을 494억원 등 947억원이었다.

청정빛고을은 2017년 1월부터 1년간 정상 가동했다.

하지만 나주에서 나주SRF 발전시설 사용 승인과 고정연료제 품 사용 신고, 사업 개시 신고 등을 수리 거부하면서 2018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4년간 가동이 중지됐다. 청정빛고을은 가동 중지 후 따른 재정위기 등을 이유로 광주시 운영비 증액을 지속해서 요청했고, 광주시는 상호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렬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로 넘어갔다.

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1단계 상호 협의, 2단계 중재, 3단계 소송 순으로 진행

한다.

광주시는 청정빛고을과 포스코이앤씨가 증액 청구한 내용 대부분이 사업협약서상 조정(증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재 대신 법원 소송으로 진행하자고 맞서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알권리와 이의 보호 차원에서 공개 재판을 진행함에 타당하다고 보고 현재 진행 중인 중재 절차를 합의에 의해 종료하고 법원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자고 제안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귀순 광주시위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SRF 분쟁 중재 수용, 결국 시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나'라는 주제로 긴급 현안 질문에서 "중재 합의를 하게 된 배경이나 검토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어떠한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광주시,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토론회 연다

오늘 광주비엔날레 거시기홀...의견 종합 분석·정책 결정

광주시가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과 관련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광주시는 1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주비엔날레 거시기홀에서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광주시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사업 추진 현황 발표 및 호남고속도로 확장 관련 자유토론이 펼쳐진다. 8000여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시민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 사업은 오는 2029년까지 총사업비 약 8000억원을 투입, 동광주IC~광산IC

구간 11.2km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2015년 광주시와 한국도로공사가 50대 50 비율로 공사비를 분담하기로 협약, 광주시가 절반 가량인 4000여 원 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예산 부담에 따른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교통 체증 해소 및 지역 발전 필요성 등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에는 강기정 시장,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자치구, 광주상공회의소, 상인회, 대학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 토론회는 광주시 유튜브 '헬로광주'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1면 '광주 중심상업'서 계속

또 조례안 제의 과정이 집행부와 시의회 '기 싸움'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조례안 부결로 일단락됐지만, 광주시는 "조례안이 부결되면 시의회·시민사회·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속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해 향후 추가 논의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날 조례안이 부결되자, 광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의회의 결정은 도시계획의 공공성과 체계성을 지키려는 광주시의 우려가 담긴 목소리를 시의회가 수용한 것"이라며 시의회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어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가 앞으로 힘차게 나아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시와 시의회, 시민사회,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광주에 맞는 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화순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즈라라

어린이들에게 호기심과 즐거움, 꿈 찾는 진로 체험!
키즈라라에서 30여가지 직업 체험을 만나보세요!



30여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직업체험관



꼬마허어로 슈퍼패과 함께 놀 수 있는

영유아 체험관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키즈라라 잔디광장



키즈라라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체험

- 즐거운 삶의 문화를 창조하는 항공훈련센터·뷰티살롱 등
- 미디어로 소통하는 TV 방송국·1인 방송국 등
- 호기심을 갖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공룡연구소·AI 로봇연구소 등
-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쿠키·치즈공방·식품연구소 등
-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서·경찰서 등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온천1길 35

T. 1600-7953